

“2008년 환산지수 연구에 참여해 주세요”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 전국 회원들 적극 협조 당부

“200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7월 7일 서울역 그릴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2008년도 환산지수 연구가 발주됐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는 2008년도 적용 환산지수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책임연구원 안태식)에 ‘200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용역 의뢰한 바 있다. 연구를 위한 조사표에서는 ▲일반현황 ▲인력 및 인건비 ▲직종별 활동시간 ▲약품비 및 재료비 ▲관리비용 ▲2006년 연간 수입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표본 선정된 치과병·의원 약 700개 기관이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매년 모든 요양기관에 단일 보험수가를 적용해 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요양기관의 유형별 분류에 따라 치과 부문이 독립돼 보험 수가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산지수 산출이 요구되고 있다”며 “2008년도 보험수가 산정을 위한 치과 병·의원 조사표가 해당 회원에게 발송되면 번거롭겠지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충실한 자료보

다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영 부회장은 “의과에서는 보험에 사활이 달려있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치과에서는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조사표 설문조사에 대해) 다소 귀찮아할 수도 있다”며 “해당 임원들이 독려해서라도 이번 연구가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적어도 100개가 넘는 기관에서 응답이 와야 한다”며 “수거율이 너무 낮으면 협회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 흠집을 잡기가 더 쉬워져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치과 진료위험도에 대한 연구가 연세대 의료법윤리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치과 비급여행위로의 전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해 이뤄진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회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바뀐 의료급여법과 새롭게 도입된 의료급여 자격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변경(안), 건강보험약제 사정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병용 연금기 의약품 항목 확대,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심사,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등 현안 논의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은 7월 23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치과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내년에 첫 배출되는 치과 의사전문 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소수정에 원칙에 기반을 둔 전문의제도 결의사항 이행 여부 및 자격시험 실시 등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빠른 시일내에 치과 의사전문 의제도 시행위에서 관련 분과학회 등과 협의해 소수정에 원칙 이행 여부를 비롯한 각 전문과목별 적정 비율 배출 등에 대해 전체 회원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차기 이사회에서도 시행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대한구강보건학회 국

제학술대회 후원명칭 사용요청에 대해 명칭사용을 허락키로 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아울러 보수교육위원회 위원에 국윤아 군무이사를 추가로 위촉키로 결정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달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의무도입 대상에 치협도 해당돼 취업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정한 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기타 보고사항으로 공직회원 자격범위 대책반회의를 포함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기준(안), 카드기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한국외환은행 업무제휴 협약(안), 28일부터 협회 사무처 및 치의신보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보고 등이 이어졌다.

안성모 협회장은 “휴가철에도 회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 만큼 힘들더라도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치과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조체제 강화 투쟁 지속”

9월 국회 개원 동시 1인시위 계속 / 범의료 4개단체 의료법 비대위 회의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 4개 단체는 앞으로도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강화하면서 앞으로의 투쟁에 임하기로 했다. 범의료 4개 단체는 7월 2일에 이어 30일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국회 앞 1인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시위 첫날에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한 4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토록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 ▲운동 등과 같은 친선대회 ▲임원 위주의 모임을 갖고 대선주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3가지 범의료 4개 단체 연합대회 개최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또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투쟁로드맵 중의 하나로 국회가 주최하는 의료법 관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강기정 의원이 성폭력 범죄 등을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면허 재교부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상식이하의 입법추진안'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입법저지를 위해 강력히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지부와 강 의원의 해당지역인 광주 북구갑에 소속된 4개 단체가 함께 항의방문해 강력 항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김성욱 총무이사, 이원균 공보이사, 김영주 보협이사가 참석했으며, 의협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형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범의료 4개 단체는 지난 6월 국회앞 1인 시위 등 임시국회 투쟁을 마치면서 7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국회제출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국회 앞 집회를 열 것"이라며 "만일 정부안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즉각적인 전면 휴폐업에 돌입키로한 범의료 비대위의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대위는 "앞으로도 의료법 개정관련 투쟁에 있어서 그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위해 범의료계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지부에 심의 일부 기능 이관 필요”

시도지부 법제이사·치협 법제위원 연석회의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 치과계 굵직한 현안의 중심에 있는 치협 법제위원회가 전국 법제이사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7월 28일 열린 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치협 법제위원 연석회의에서는 개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관련, 지부 법제이사들은 해당 지부와 치협이 공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신계범 법제이사(경남지부)는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인정되지 않은 효능을 쓰거나 명확치 않은 의학용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실제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기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이사는 "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부의 1차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부 법제이사들은 심의를 거친 내용에 맞춰 실제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부에 일부 기능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빈

번한 것으로 지적돼 개선이 요구되기도 했다.

기호경 인천지부 법제이사는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매체를 이용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시행령에 규정된 심의대상 매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사전심의 대상인 벽보 대신 LED, 현수막 대신 입간판의 활용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버스, LED 등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도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심의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법제이사는 또 "치협, 의협, 한의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니 치협의 입장만을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부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이 밖에 "지부에서 1차 사전심의의 거치는 방안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